

전국중소형서점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 긴급 기자회견 열어

교보문고, 중소형 서점 잠식 논란

를 지속한다면 출판산업과 서점업계의 저해는 물론 국가문화 발전에 크게 퇴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며, 출판물은 다른 공산 품과 달리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의 경우 교보문고와 유사한 체인점 설치는 정책적 제제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 교보문고는 혼란한 정책의 틈을 이용, 자유시장경제원리라는 명분을 중소서점인들을 무참히 말살하게 하는 부도덕한 사업정 신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 중 대구 교보문고 지점이 전국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대구광역시 서점조합 김종철 조합장의 성명서에는 “대구 동성로2가 교보생명빌딩 내에 교보문고가 진출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학원서점, 대구서적, 태극서점, 본영당, 청운서점, 하늘북, 제일서적 등 30여 개의 중소서점이 폐업했다”고 전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교보 대구지점이 1999년 9월에 출점 당시만 하더라도 350여 개의 소매서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100여 개 서점이 폐업하고 200여 개의 서점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1994년 6월 17일, 사단법인 전국서점조합연합회(갑)와 교보문고(을)가 합의한 내용을 교보문고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합의사항은 ‘전국적인 체인을 형성해 서점업계를 독점하지 않고 해당지역의 서점업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서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보문고는 PC통신 및 통신판매는 외국서적 및 특수서적에 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교보문고 홍보팀 남성호 팀장은 1,500억 원 증자와 100개 지점 확장에 대해 “2005년도에 교보생명에서 금융감독 위원회에 교보문고 증자가 가능한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지만, 1,500억 원 증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알고 있다. 또한 100개 지점확장도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탁무권 위원장은 “교보문고는 앞으로 지점 확장을 강행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대응해 중소형 서점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0억 원은 중소형서점의 몰락을 야기시키는 숫자이다. 국민들은 서점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서점의 양극화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설명했다.

출판계의 한 원로학자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서점계도 병들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중소형 서점에서도 마케팅 활로를 적극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월 20일, 천여 개 서점 대표로 구성된 ‘전국중소형서점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의 주장은 교보문고의 1,500억 원 편법증자와 무차별적 분점 확장으로 중소형 서점의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보문고는 전국적으로 1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비대위 탁무권 위원장은 ‘한국 도서출판 산업발전을 위기로 몰아가는 교보문고’라는 제목으로 “교보문고가 계속 분점 설치

최재 · 사진_정윤희 기자